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민형배의원, 제1507)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불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4.7.26 (금)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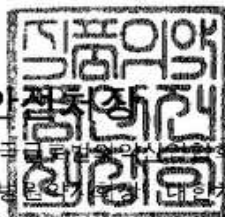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제2201507호]

-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40조의4 및 제59조)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국립중앙의료원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병원약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수의사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주무관

황재양

약무사무관

박미영

마약정책과장

진결 2024. 7. 12.

정현철

협조자

시행 마약정책과-11640

(2024. 7. 1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

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 mids.go.kr

전화번호 043-719-2805

팩스번호 0502-604-7992

/ whgdkgo@korea.kr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명옥의원, 1460)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불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4.7.26 (금)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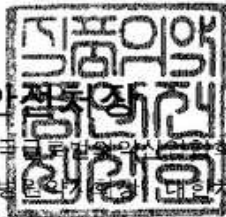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제2201460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국립중앙의료원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병원약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수의사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주무관

황재양

약무사무관

박미영

마약정책과장

진결 2024. 7. 12.

정현철

협조자

시행 마약정책과-11643

(2024. 7. 1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

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 mids.go.kr

전화번호 043-719-2805

팩스번호 0502-604-7992

/ whgdkgo@korea.kr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7
----------	------

발의연월일 : 2024. 7. 8.

발 의 자 : 민형배 · 이재관 · 이상식  
김태년 · 박홍근 · 이성운  
김원이 · 이수진 · 이기현  
소병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을 타인에게 몰래 먹인 자는 처벌하고, 투약 당한 자를 치료보호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먹인 후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퐁당마약’이 자주 벌어집니다. 마약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살인·강간 등 2차 범죄까지 이어집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근절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강화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투약 당한 피해자를 치료보호할 규정이 없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 2 -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풍당마약’을 근절하고,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0조의4 및 제59조).

## 법률 제 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마약투약피해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9조제3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하여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마약류 검출 여부를 판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를 하려면 제40조제4항에 따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를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4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 중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4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1. ~ 14. (생 략)</p> <p>② (생 략)</p> <p><u>&lt;신 설&gt;</u></p>	<p><u>제40조의4(마약투약피해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9조제3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하여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마약류 검출 여부를 판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u></p> <p><u>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를 하려면 제40조제4항에 따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제59조(벌칙) ① ----- ----- -----.</p> <p>1. ~ 1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4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 중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u></p>

- 6 -

<p>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④ (생략)</p>	<p><u>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p> <p>④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0
----------	------

발의연월일 : 2024. 7. 8.

발 의 자 : 서명옥·조정훈·백종현  
서천호·성일종·박성민  
김은혜·김성원·김기현  
김종양·박준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이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 2 -

나.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 법률 제 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6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을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질병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질병분류기호와 질병명은 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 4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법률 제196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 ③ (생략) <u>&lt;신설&gt;</u></p>	<p>법률 제196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화를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④ (생략)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생략)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 다만, 질병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질병분류기호와 질병명</p>

<p>③ (생 략)</p> <p>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lt;후단 신설&gt;</p> <p>1. ~ 4. (생 략)</p> <p>③ ~ ⑫ (생 략)</p>	<p><u>은 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u>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⑫ (현행과 같음)</p>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서**

※ 담당자 : 000국 000과 000(전화번호 기재)

개정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